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미국 연방 의회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

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안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일방적 감축 견제’ 美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의결  
트럼프 서명하면 발효…‘감축 제약’ 조문 5년만에 재등장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처럼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NDA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

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천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NDAA는 동맹국의 국방자금 지원을 비판해 온 극우성향 공화당원의 반대를 넘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강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일, 한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하면서 ‘전쟁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촬영

## “트럼프 경제 지지도 36%…집권 통틀어 최저치”

PBS·마리스트 여론조사…“응답자 70%, 생활비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가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

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3.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도 하락은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였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감당하기 매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해당 질문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반면 생활비가 감당할만하거나 매우 감당할만하다고 답한 사람은 30%로, 이전

조사의 55%에서 크게 하락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바 있다. 2022년 초 물가상승률이 정점으로 향할 때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도 36%까지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경제 불만을 적극 활용해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의 이런 불만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잡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PBS는 보도했다.

마리스트 여론조사 연구소장인 리 미링고프는 “생활비 부담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 책임은 결국 최고 행정 책임자(대통령)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